서울경제신문　답변서

1. 교육교부금 개편과 전문대학 재정 관련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연동액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전문대학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전문대학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정부 방안에서 전문대학 지원 방안이 충분히 구체화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개편은 예산을 나눠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전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1971년,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때는 초중등 교육 인프라 확충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고 그 공식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인 만큼, 이번 산식 개편은 그 공식을 지금의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는 합리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폐지 이후 남는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재원이 '교육·인재계정'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기는 만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직업교육 혁신의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설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 기금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교육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현재 정부 방안은 방향은 맞지만 그 구체성은 앞으로 채워가야 할 과제입니다.

2. 고등교육 재정이 늘어도 전문대학 몫이 보장되는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는 전문대학뿐 아니라 영유아교육, 일반대학, 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 여러 분야가 함께 들어갑니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놓고 분야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도 있는데, 전문대가 별도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답변]

한정된 기금 안에서 몫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업교육을 국가 교육체계의 독자적인 축으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 체계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이라는 구분만 있을 뿐 직업교육이라는 별도의 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계고에서 시작해 전문대학의 학사·석사과정으로 이어지고,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시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성인학습자, 즉 평생직업교육까지 아우르는 직업교육은 이미 그 자체로 독립된 교육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교육을 국가 교육체계의 독자적인 축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의 책무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교육법이 법제화되면 직업교육 재정 역시 일반대학·영유아교육·평생교육과 뒤섞인 혼합 계정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계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대학이 다른 분야와 예산을 다투는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 위에서 직업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과 전문대학 역차별 문제 관련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역시 상당수가 지역에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대만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적용할 경우 지역 전문대학의 학생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역 사립대학의 신입생 모집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산업 현장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는 곳은 국립대만이 아닙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지역 사

립대학 역시 간호·반도체·AI·제조 등 지역 산업과 밀착해 실무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국립대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대상 사이에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록금 면제가 곧 지역 정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공부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남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지역에 남게 하는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결국 입학보다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입구와 출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이공계·반도체·AI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함께 가야 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방식을 넘어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지역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실제로 생겨야 등록금 지원의 정책적 효과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4. 전문대학에도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 정부는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전문대 학생에게도 동일한 장학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대학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등록금·장학금 지원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전문대학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은 지금 평생직업교육의 최전선입니다.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시 배움의 길에 들어선 성인학습자, 중장년층 학생들에게 가장 큰 허들은 학비입니다. 또한 한국에 정주하기 위해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 특히 E-7 취업비자와 연계된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우리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메울 잠재적 기술인력이기도 합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는 평생직업교육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략 직종의 외국인 기술인재에 대해서는 취업·정주

와 연계한 별도의 장학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이도 국적도 아닌, 지역 산업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인재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5. '서울대 10개 만들기' 속 전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정부의 대학 정책이 거점 국립대 육성과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산업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간호·보건·반도체·AI·제조 등 실무 인력 양성에는 전문대학의 역할도 큰데요.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전략에서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대학을 지역 산업과 연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거점 국립대 육성과 전문대학의 역할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정책에는 전문대학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기업인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를 최고 대학 출신으로만 채우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연구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기업이 굴러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 인력양성 체계는 산업 현장의 직업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산업에 어떤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어떤 숙련이 필요한지를 아는 상태에서 인력양성 체계가 짜이고, 그것이 교육체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대학 정책은 여전히 대학의 위상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고, 산업의 인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은 역할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거점 국립대가 연구와 고급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면, 지역 산업 현장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은 라인에서 설비를 다루고 병상에서 환자를 돌보고 반도체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 인재입니다. 전문대학은 오랫동안 이 역할을 담당해 왔고, 졸업생 상당수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그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대학 육성 전략에서는 이 역할이 아직 정책적으로 충분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

니다.

전문대학에 부여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반도체·배터리·AI 같은 첨단산업부터 간호·보건 같은 필수산업까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지역 산업의 인재 플랫폼입니다. 거점 국립대 육성과 함께, 지역마다 산업 맞춤형 전문대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6. 전문대학 재정난과 등록금 인상 관련

> 올해 전문대학 125곳 가운데 102곳, 81.6%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등록금 인상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대학이 늘어난다면 정부 재정지원 체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올해 전문대학 125곳 중 81.6%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구조적 위기의 신호이며, 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은 줄고, 등록금은 오랫동안 사실상 동결되어 온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면서 전문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원사업비는 상당폭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업비는 용처가 정해져 있어 인건비나 경상경비 같은 대학 운영의 기본 살림에는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려면 교육 환경 자체를 계속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을 아는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하고, 실습 장비와 시설을 산업의 변화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을 유지하는 돈이 아니라 대학을 바꾸는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경영의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가야 하며, 그 점에서 국립대와는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의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과 설립 이념은 존중되어야 하며, 재정 지원이 획일적인 대학 운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지원 체계는 사업비 증액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기본 운영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국가 재정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혁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대학이 매년 사업 공모에 매달리는 대신 각자의 설립 이념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육 투자와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7. 학령인구 감소 시대 전문대학 구조조정 관련

> 정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전문대학에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전문대학이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대학 역시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것과 지역의 직업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지역의 직업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이상, 경쟁력을 잃은 대학이 퇴로를 찾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만큼, 청산 절차의 실효성이나 재직 교직원의 고용 승계,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시급히 보완해가야 합니다. 대학 한 곳의 폐교는 재학생 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지역 상권과 일자리, 인구가 함께 빠져나가는 지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에는 질서 있는 퇴로를 마련하되,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내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편입 지원, 그리고 그 지역의 직업교육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대체 인프라

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8. AI 시대에 전문대학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AI 확산으로 단순 사무직뿐 아니라 기존 전문기술 직무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직무 역량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미스매치 문제도 계속 제기됩니다. 앞으로 전문대학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길러내기 위해 학과·학제·산학협력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AI 시대 전문대학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즉시 쓸 수 있는 융합 실무 역량입니다.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체의 AI OS가 되어야 합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관리, 피지컬 AI 공장 관리 같은 새로운 융합 직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관리는 IT뿐 아니라 전력·전기 설비와 냉각 시스템까지 이해해야 하는 직무이고, 로봇과 AI가 작업하는 공장에서도 이를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인력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런 융합 직무는 강의실 이론만으로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실제 장비를 다루고 현장의 문제를 몸으로 풀어본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역량입니다. AI가 80점짜리 답을 빠르게 만들어준다면, 나머지 20점을 현장에 맞게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실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숙련기술인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AI가 확산될수록 현장을 아는 기술인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AI 데이터센터에는 시스템 통합(SI)과 전력, 냉각을 함께 다루는 복합 관리 기술이 필요하고, 피지컬 AI가 작업하는 공장에는 로봇을 조정하고 설비 데이터를 읽어내며 함께 작업하는 사람과 로봇의 안전을 함께 관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도 기존의 단일 학과로는 교육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IT·전기·기계·안전 같은 분절된 학과 경계를 허물고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하며,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하는 기업과 직접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 산업이 AI 전환이라는 하드웨어를 갖췄어도 이를 실제로 움직일 실무 인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산업 현장에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즉시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AI 시대 전문대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AI 시대의 융합 직업교육 모델을 K-TVET으로 발전시켜 세계로 확산하는 것도 앞으로 전문대학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입니다.